

IJS JAPAN REVIEW



한·일 언론인의 창(窓)

‘사형제도’를 통해 본 일본 사회와 한국 사회

사토 다이스케(佐藤大介) | 교도통신사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

‘사형제도’를 통해 본 일본 사회와 한국 사회

일본과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공통점이 많아 서로가 서로의 제도와 방법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 발전해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있다. 그중 하나가 사형제도다. 선진국 주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8개국) 가운데 사형제도가 있는 곳은 일본과 한국, 미국뿐이다. 하지만 그 운용에 대해서는 3개국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과는 별도로 주법에 근거한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남부의 주를 중심으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2021년에 사법장관이 연방법에 근거하는 사형 집행의 일시 정지를 표명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는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은 지난 2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본은 매년 사형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2023년은 집행 없음). 2018년에는 옴진리교 전직 간부 13명을 포함해 총 15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한국의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사형제도가 있고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국이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형제 재개 논의는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 사형제 재개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한국 정부와 전문가 등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한국에서는 서울구치소 외에도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 교도소 등 3곳에 교수대가 있어 사형수들이 분산되어 수용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을 대량집행 한 이후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형제 폐지 국가’는 총 144개국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122개국, 일반 범죄만 폐지(군법회의 범죄나 특수한 상황에서의 범죄와 같은 예외적인 범죄에만 사형을 적용하는 국가)한 국가가 9개국,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23개국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사형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정책이나 관습이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은 사형집행을 25년 이상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사형폐지국 그룹에 속하지만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존재해 1998년 이후에도 사형선고가 내려졌으며 2023년 말 현재 59명(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가 난 4명 포함)의 확정 사형수가 있다. 하지만 사형 확정 판결은 감소 추세다. 한국 국회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9명의 사형 확정자가 나왔다. 그 뒤로는 사형이 미집행 된 해가 두드러져 2015년 한 명을 끝으로 사형 확정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사형수는 집행 없이 장기간 구치소 등에 수용돼 있으나 199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19명이 사면 등 감형 조치를 받았고 12명이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사형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 법무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결과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서는 “각국의 역사, 사회·문화적 배경, 국민적 여론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하는 답변이 왔다. 한국 정부는 2020년 11월 사형 폐지를 염두에 둔 사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기존 기권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한국이 사형제 폐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결의안에 찬성하였다”고 설명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실제 집행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는 원칙론을 제시한 뒤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 국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배경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존재가 컸다. 한국사형폐지운동협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1948년부터 1997년까지 처형된 사형

수는 902명(군사재판에 의한 사형 제외)으로 이 중 약 40%가 정치범이었다고 한다. 특히 군사독재정권을 세웠던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형제도가 시행되어 많은 활동가들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그중 한 명이 김대중 씨였다. 박 정부 시절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인민혁명당 사건에서는 1975년 8명에 대해 사형선고가 내려진 뒤 24시간 이내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집행되었다. 두 사건에 대해서는 2007년 한국 정부가 박 정권에 의한 민주화 탄압으로 인정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한국의 사형제도는 시대별 권력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돼 왔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김대중 씨가 사형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1998년 대통령에 취임한 뒤 집행을 멈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후 정권은 역시 혁신계 노무현 씨에게 넘어갔고, 보수계 이명박 씨,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올랐지만 한국 정부는 집행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 25년 사이에 이번 외에 사형 재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8년 10년 만의 보수 정권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강력사건이 발생하자 이번과 마찬가지로 법무장관이 형장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또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새로 지어 사형수를 한 곳에 모으는 것도 계획됐으나 무산됐다. 정부 당국자는 법무부가 사형 집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EU와의 경제동반자협정 영향 등을 고려해 외무성이 강경하게 반대해 미뤄졌다고 털어놨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을 재개하면 EU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사형 집행에 대한 국제적 반응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사독재정권과 민주화운동 경험 등으로 볼 때 사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규정돼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는 한국 여론의 다수 의견이 아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고 그중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도 적시했다. 그것에 의하면, 사형제도에 대해 「반드시 유지/강화 되어야 함」이라는 회답이 19.9%,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이라는 회답이 59.8%로 찬성으로 분류되는 의견이 79.7%를 차지했다. 한편 반대 의견은 「당장 폐지되어야 함」(4.4%),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함」(15.9%)으로 합계가 20.3%로 큰 차이가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실시한 비슷한 조사 결과와의 비교다. 2003년은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이 65.9%로, 반대 의견은 34.1%였다. 15년간 사형에 반대하는 의견은 13.8% 포인트나 감소한 셈이다. 특히 두드러진 것이 강력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변화다. 사형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3%에서 19.9%로 급증하고, 한편으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3.2%에서 4.4%로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본 정부가 사형제도의 옳고 그름을 묻은 2019년 여론조사에서 약 80%가 ‘사형도 어쩔 수 없다’고 응답한 결과와 겹친다. 사형집행이 25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인정받

고 있는 한국에서도 사형에 대한 여론은 사형집행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사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으면 정치인의 행동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다. 한국 국회에는 지금까지 7차례 사형폐지법안이 상정됐으나 모두 심의 미필로 폐안됐다. 사형 재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국회에서의 사형 논의는 저조하다.

그렇다면 향후 사형제도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까?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대다수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입장을 뒤집는 판단은 쉽지 않다”며 사형제 재개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지만, 사형 집행에 대한 항의 운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사형 미집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사형은 비일상적인 존재가 됐다. 이는 엄벌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이 사형 집행을 계속하는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집행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적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1998년 11월부터 집행 사실과 인원만 공표하게 됐지만 그때까지는 집행에 관한 정보는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2007년 12월부터는 집행된 사형수의 성명, 생년월일, 집행장소, 범죄 사안을 공개하게 됐지만 그 사형수를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나 집행 경위, 유언 등의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사형수 처우도 문제다. 사형 집행은 직전 당일 아침까지 알려지지 않고 사형이 확정되면 서신 왕래나 면회 등 외부와의 접촉은 극단적으로 제한된다. 생물적 생명을 빼앗기 전에 사회적 생명을 빼앗는다는 처우를 하는 이유를 법무부는 사형수 심정의 안정이라고 설명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비판도 많다. 사전 고지 없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사형제도의 근간을 묻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원죄의 문제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4개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사형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 1966년 시즈오카(静岡) 현 내에서 4명이 살해된 하카마다(袴田) 사건에서는 범인으로 체포돼 사형이 확정된 하카마다 이와오(袴田巖) 씨의 재심 개시가 2023년 결정돼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여론이나 국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사형에 관한 정보의 대부분을 비밀에 부치는 것도 큰 요인이지만, 한국과는 반대로 일본 사회에서 사형이 ‘일상화’된 것도 논의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1990년 전후 사형집행정지가 계속되고 유엔총회에서 사형폐지조약이 채택되기도 하여 시민단체나 법조계에서 사형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었다. 1990년에는 <사형폐지조약 비준을 요구하는 포럼 '90>이 결성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사형문제 전문가이자 동국대 법대 초빙교수인 박병식 씨는 일본 유학 중 <포럼 '90>에 참석했다. 당시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사형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박병식 씨지만 이후에는 한국이 앞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어 버린 것에 대해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낀다”고 말했다.

일본에는 106명의 사형수(2024년 1월 현재)가 있다. 국제적인 폐지의 조류나 누명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현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에서의 사형제 논의의 역사는 일본에서 사형을 생각하는 데 있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사토 다이스케(佐藤大介)

교도통신사(共同通信社)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

<IJS일본리뷰>는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재)학봉장학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